스마트농업 키우고 기후위기 대비… 농업 현장 혁신 속도

농어촌공사, 국정이음 회의 개최
AI·빅데이터로 스마트농업 고도화
청년농 창업·농업용수 지원 논의
집중호우·가뭄 대비 시설 개선
기후변화 맞춰 수리시설 개편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편에 나선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정과제와 농촌현장을 잇는 이른바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최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정과제 68번) 회의와 2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국정과제 43번)' 회의가 그중 일부다.

'KRC 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과제가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이해관계자가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앞선 27일 회의에서는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가운데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현장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농촌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에 맞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스마트온실 도입률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날 테마회의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공사는 '스마트농업 사업 현황 및 확산 방안'과 '스마트온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수행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농업 데이터 표준화'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인공지능 기술 및 기자재 현장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반 조성부터 창업 애로사항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지역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협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 ▲청년농 창업 컨설팅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장비 규격화 ▲온실 특성을 반영한 시공기준 고도화 ▲대규모 온실 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 최적화 ▲청년농의 자금·부지 확보 등이다.

공사는 제시된 의견 중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전남광주, 고흥군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농산업체 관계자, 청년농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뒷받침해 농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전주에서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국정과제 43번)'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기후 여건을 바탕으로 설계된 수리시설의 현재와 미래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 한계를 진단하고, 시설·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모으는 데 초점을 뒀다.

남재철 전 기상청장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주제로 이상기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이어 유승환 전남대 교수는 '기후변화 내재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계획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수리시설 설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회복 중심으로의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환 ▲공사 사업·시설 관리 계획과 기후 취약성 평가 연계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밖에, 기후 여건 변화에 맞춰 설계기준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또 농업인의 의견을 시설관리와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사장은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KRC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사업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선제적 예방과 과학적 대응을 강화해 농어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16일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국정과제 70번)을 주제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 농업, 미래 전략산업 도약 갈림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위기 진단
인구감소·기후변화 대응 강조
2045년 농업·농촌 미래비전 제시



송미령(앞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45 전략'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노동력 급감 탓에 활력을 상실해 사양길로 치닫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지난 6일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를 비롯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기관, 식품, 푸드테크, AI 부문 관계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美 EPRI와 청정수소 기술협력 강화

한수원, 청정수소 기술 포럼 개최
원자력 수소 생산 실증방안 논의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저탄소자원계획(LCRI) 팀과 공동으로 '2026 청정수소 생산기술 활성화 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운영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PRI LCRI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저탄소 에너지 자원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정수소 생산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인 수행 ▲수전해설비 구축·운영 기술의 국산화 ▲대용량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기술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술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청정수소 수전해 실증시설 건설 및 시운전 단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대용량 프로젝트 개발·설계, 자격 평가 등에 대해 EPRI LCRI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영곤 한수원 수소융복합처장은 "앞으로도 EPRI LCRI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활성화 및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제수로기구 첫 해외 거점 부산에 설립

해수부·IHO, 9일 설립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가 이달 9일 서울에서 국제수로기구(IHO)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수로기구 간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고 8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IHO 대표인 루이지 시나피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측은 'IHO 인프라센터'를 부산에 설립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IHO는 해도와 해양정보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최근 세계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S-100은 선박의 항해 장비에서 전자해도뿐만 아니라 조석, 해류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디지털 데이터 국제표준이다.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 등 미래 해양기술에도 S-100이 핵심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IHO 인프라센터는 이러한 S-100 표준의 개발·검증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이다. 앞으로 S-100 표준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프라센터가 국내에 설립되는 것은, 그동안 축적해온 해양정보 기술력과 S-100 표준 개발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해수부는 평가했다. 특히 IHO 인프라센터는 1921년 IHO가 모나코에 본부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설립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저소득 산재노동자에 내년부터 무료 법률지원

내년 3월부터 대리인 비용 전액 지원

내년 3월 말부터 저소득 산재노동자와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3월30일 시행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해 총 39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가 산재보상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 및 유족이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또 산재보험 급여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단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노동자나 유족의 별도 비용은 없다. 변호사·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